

# ‘북미정상회담’ 카드 빼든 김정은

친서에 2차 개최 요청  
이르면 10월 열릴 듯  
비핵화 합의 동력 만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 지 주목된다.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맞교환 협상과 두 정상의 만남의 재성사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 체제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3개의 포괄적 합의를 이뤄지만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 목록 공개와 북핵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이 병행하는 ‘동시적 행동’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 정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담판 지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북미 정상은 평행선만 그리고 있는 비핵화 합의에 동력을 만들고 국내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2차 정상회담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6·12 정상회담이 1차 결단이 라면 이번 최고지도자 간에 두번째 결단을 통해 비핵화와 종전선언에서 막힌 것을 뚫고 협상의 동력을 만들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서의 북한의 추가적 행동,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성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차 정상회담 시기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올해 어느 시점에 열리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 결과물을 선거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빠르면 10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것 이란 관측도 나온다.

회담 장소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우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싱가포르 때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등 제3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고존엄에 대한 의견 문제나 대비 차원에서 안전과 신뢰가 담보 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이 워싱턴 행이 쉽지 않을 것 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다만 북한의 핵 신고리스트 제출 의지가 2차 회담 개최 여부와 성패

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턴 보좌관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며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아직도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신고 검증 부분에서 모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미국도 확인한 뒤 2차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신고검증을 받아들이는 의지가 있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10월에 충분히 개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방문해 사과 시식을 하고 있다.

## “전북도 예산대비 집행잔액 과도”

박용근, 1400억원 달해  
정확 편성으로 최소화 해야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년대비 예산 집행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1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사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2019년도 국가예산 요청액은 6조 5,113억원인데 이중 신규사업은 192건에 1828억원, 계속사업 509건에 6조3285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2017년도의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94.7%에 불과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신규예산 발굴도 중요하지만 신규예산에 비금고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매년 결산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업계획이나 전망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해서 구체적 계획과 정확한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비용추계서 포함해 국회 제출  
외교통일위원회 회부해 논의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 해주면 한반도 평

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 여기에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있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전 두 번의 경험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뉴시스

## “부동산 정책, 투기세력 도와주는 꼴” | 유성엽 의원, 정부에 쓴 소리 공급정책, 신 버블세븐 만들 것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쓴 소리를 던졌다.



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만 급급하는 등 너무 근시안적이다”고 우

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낸 투기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이 강남 살겠다고 불려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도, 공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겠다 하니 벌써부터 분당 일산 등 집값이 들쭉 거린다”고 언급하며 “결국 정

부의 엉뚱한 공급 정책이 신(新) 버블세븐을 만들어 오히려 투기세력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 역시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투기꾼 잡겠다고 대부분 무고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세가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리 정책, 그리고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자금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으로 들어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가 뒷받침 되어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